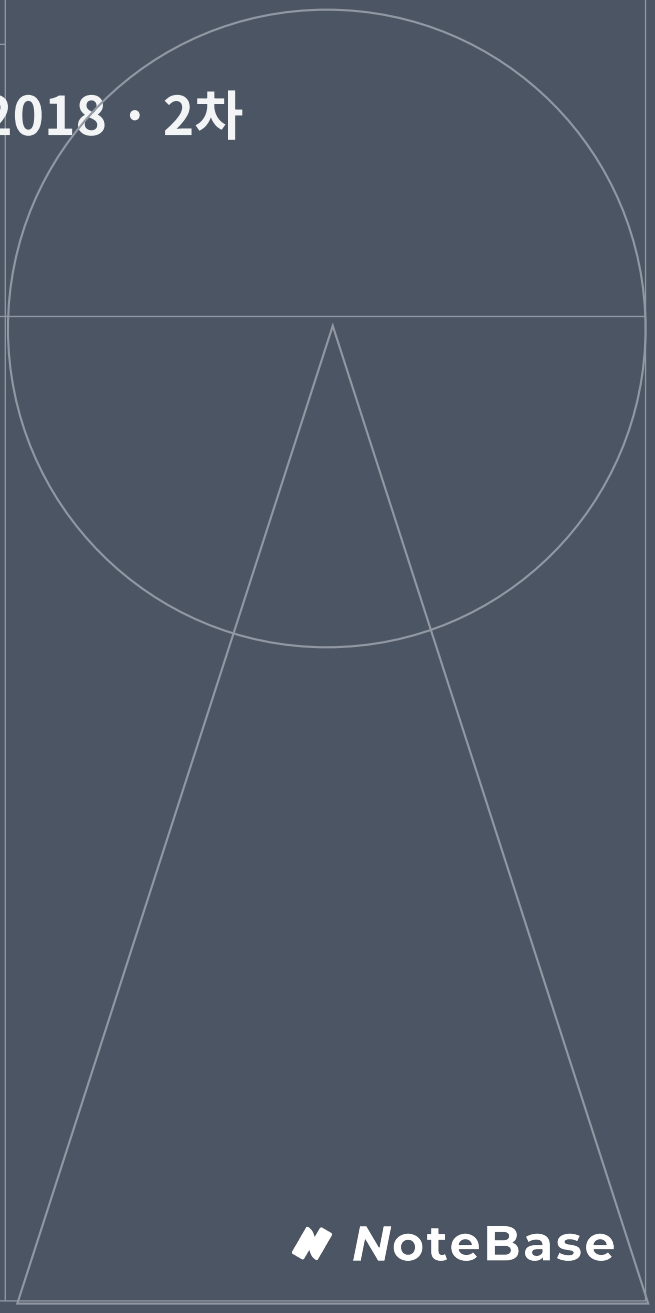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8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8 · 2차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8 · 2차

문 1.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된다면 고용 관련 지표에 나타날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사람들은 구직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경제 활동 인구에서 제외된다. 이들 중에는 구직 활동을 포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100

①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②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③ 고용률이 하락할 것이다.

④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구직단념자를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재분류할 때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구직단념자는 원래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이를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하면 취업자 수와 15세 이상 인구는 그대로이고,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한다.

사용할 공식

경제활동인구=취업자수+실업자수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100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100
재분류가 각 공식의 분자와 분모 중 무엇을 바꾸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공식들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구직단념자가 실업자로 이동하므로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2.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므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그만큼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한다.
3. 취업자 수와 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으므로 고용률은 변하지 않는다.
4. 실업자 수가 증가하므로 실업률은 상승한다.

선지 판단

① X —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가 틀렸다. 실업자로 새로 분류된 사람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므로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한다.
② X —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가 틀렸다. 구직단념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이동하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한다.
③ X — '고용률이 하락할 것이다'가 틀렸다. 고용률의 분자인 취업자 수와 분모인 15세 이상 인구가 모두 변하지 않으므로 고용률은 그대로이다.
④ O —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경제활동인구에도 편입되므로 실업률은 상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실업자가 늘면 모든 고용지표가 악화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고용률은 실업자 수가 아니라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이므로 이번 재분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구 집단의 재분류 문제에서는 먼저 이동 전후의 소속 집단을 확인한 뒤, 각 지표의 분자와 분모가 실제로 변하는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구직단념자→실업자 재분류: 경제활동인구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감소, 고용률 불변, 실업률 상승이다.

NoteBase

문 2.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가장 알맞은 법을 고르시오.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근로복지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③ 사회보장기준법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법률의 목적과 기본 의무를 나타내는 조문을 보고 해당 법률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법과 근로복지·사회보장·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을 뜻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 체결한 협약이다.

핵심 구분

근로기준법 제1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규정한다. 제시문의 두 문장은 이 두 조문의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제시문처럼 근로조건의 기준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준수 의무를 정한 법이 아니다.
틀린 표현: 근로복지기본법
올바른 표현: 근로기준법

② O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한다는 목적과 근로자·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준수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조와 제5조의 내용이다.

③ X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이며,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사항을 규율한다. 제시문의 근로조건 기준과 노사 당사자의 계약 준수 의무에 관한 법은 아니다.
틀린 표현: 사회보장기준법
올바른 표현: 제시문에 해당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며, 사회보장 분야의 기본 법률 명칭은 사회보장기본법이다.

④ 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다. 제시문의 근로조건 최저기준과 개별 근로관계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법이 아니다.
틀린 표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올바른 표현: 근로기준법

오답 포인트

제시문에 '단체협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법률을 식별할 때에는 한 단어보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다'는 목적 문구를 우선 확인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정책·복지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노동3권·노동쟁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근로조건의 기준과 계약 준수는 근로기준법, 노동 3권과 쟁의 조정은 노동조합법이다.

NoteBase

문 3. 다음 글과 관계 깊은 사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계약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 이 국가는 국민들이 일반의지를 실현하려는 기구이다.

<보기>

ㄱ. 사회 계약설

ㄴ. 자연권 사상

ㄷ. 절대군주제

ㄹ. 군주 주권사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연 상태의 자유·평등, 계약에 의한 국가 구성, 일반의지라는 표현을 통해 사회 계약설과 자연권 사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 계약설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상호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한다고 보는 사상이다. 자연권 사상은 인간이 국가 성립 이전부터 자유와 평등 같은 권리를 본래 가진다고 보는 사상이다. 반면 절대군주제와 군주 주권사상은 국가의 최고 권력이 군주에게 집중되거나 귀속된다고 보므로, 국민의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국가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의 사회 계약설은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는 부분에, ㄴ의 자연권 사상은 자연 상태의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부분에 각각 부합한다.
② X — ㄷ의 절대군주제가 포함된 점이 틀렸다. 절대군주제는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이므로 국민의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국가와 맞지 않으며, 올바른 조합은 ㄱ과 ㄴ이다.
③ X — ㄹ의 군주 주권사상이 포함되고 ㄴ의 자연권 사상이 빠진 점이 틀렸다. 최고 권력의 주체를 군주로 보는 군주 주권사상이 아니라, 자유·평등한 개인의 자연권을 전제로 하는 사상이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과 ㄴ이다.
④ X — ㄷ의 절대군주제와 ㄹ의 군주 주권사상은 모두 군주 중심의 권력관이어서 틀렸다. 이 글과 관계 깊은 것은 ㄱ의 사회 계약설과 ㄴ의 자연권 사상이다.

오답 포인트

국가의 성립을 설명한다는 이유만으로 군주제 관련 사상을 고르면 안 된다. 이 글의 결정적 표현은 '계약', '자유와 평등', '국민의 일반의지'이며, 모두 군주 중심이 아니라 개인과 국민을 국가 권력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 상태의 자유·평등'이 보이면 자연권 사상을, '개인들의 계약으로 국가 성립'이 보이면 사회 계약설을 연결한다. '일반의지'가 제시되면 군주 주권이 아니라 국민을 주권의 주체로 보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유·평등한 개인의 자연권 → 계약으로 국가 구성 → 일반의지 실현이다.

NoteBase

문 4. 다음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조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약속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ㄴ. 법의 일반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과 같이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의 원칙이다.
ㄷ.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시 그 효력은 즉시 인정된다.
ㄹ.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묵시적 합의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내정불간섭의 원칙 등이 해당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조약, 법의 일반원칙,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법원으로 성립하고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조약의 구속 범위와 우리나라에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효력을 갖기 위한 절차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국제법 규범이 성립하는 형식이나 근거를 뜻한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그 조약에 동의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국제관습법은 일반적인 국가 관행과 그것을 법으로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결합하여 성립한다. 법의 일반원칙은 여러 국가의 법질서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기본 원칙이다.

핵심 구분

조약은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조약의 구속을 받기로 동의한 당사국에 적용된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는 국제협약,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인 국제관습, 여러 국가가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을 재판에 적용할 국제법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리지만 ㄴ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ㄱ, ㄴ'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② O — ㄱ과 ㄷ이 모두 틀리다. ㄱ의 '별도의 절차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그 조약에 동의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ㄷ의 '효력은 즉시 인정된다'는 표현도 잘못되었다.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에 인정된다.
③ X — ㄷ은 틀리지만 ㄴ은 옳고, 틀린 ㄱ이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ㄴ, ㄷ'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④ X — ㄴ과 ㄹ은 모두 옳다. ㄴ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설명하고, ㄹ은 일반적인 국가 관행이 법으로 수락되어 성립하는 국제관습법을 설명한다. 내정불간섭의 원칙도 국제관습법의 예로 볼 수 있다. 틀린 표현은 'ㄴ, ㄹ'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오답 포인트

ㄱ의 '법적 구속력'만 보고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거나, ㄷ에서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만 보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놓치기 쉽다.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대통령의 체결만으로 즉시 국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약 선지는 먼저 적용 대상을 확인한다. '모든 국가'라고 단정하면 당사국에 대한 구속이라는 원칙과 대조한다. 우리나라의 조약 효력 선지는 체결 주체만 보지 않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인지와 체결·공포 절차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조약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을 구속하고, 안전보장 조약은 국회 동의를 거쳐 체결·비준하며,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되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NoteBase

문 5. 다음 정치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익집단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② 시민단체는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다.

③ 이익집단은 비영리성을 추구하고 시민단체는 영리성을 추구한다.

④ 정당은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정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추구하는 이익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조직이다.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시민단체는 공익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조직이다. 정당은 정권 획득과 정치적 책임, 이익집단은 특수 이익과 압력 행사, 시민단체는 공익과 비영리 활동이 핵심 구별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이익집단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이다. 의회와 정부를 연결하고 양자의 협조를 이끄는 기능은 정당의 기능이다. 이익집단은 정책 결정자에게 특정 집단의 요구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시민단체는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다'이다.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정권 획득을 추구하는 조직은 정당이다. 시민단체는 공익 실현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감시하거나 대안을 제시한다.
③ X —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성격을 뒤바꾼 표현이다.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이고,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이익집단을 모두 영리 조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시민단체가 영리성을 추구한다는 부분은 명백히 틀리다.
④ O —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권 획득을 추구하고, 집권하거나 의회 활동을 한 결과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으므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오답 포인트

①은 '매개'라는 익숙한 표현을 이용해 정당의 기능을 이익집단의 기능처럼 바꾸었고, ②는 후보자 공천 기능을 시민단체에 붙였다. ③은 시민단체의 비영리·공익적 성격과 이익집단의 특수 이익 추구를 서로 뒤섞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후보자 공천·정권 획득·정치적 책임은 정당, 특정 집단의 요구 전달·압력 행사는 이익집단, 공익 추구·비영리·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시민단체로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정당은 정권과 책임, 이익집단은 특수 이익과 압력, 시민단체는 공익과 비영리이다.

NoteBase

문 6. 다음은 '甲'이 해양경찰 입사 시험공부를 통해 하루씩 공부할 경우 획득 가능한 예상 득점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남은 기간은 5일이다)

공부일수	예상점수		
	A과목	B과목	C과목
0	52	62	63
1	62	70	72
2	70	77	80
3	77	84	87
4	83	90	89

① 기회비용이 높은 과목부터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가장 합리적으로 공부했을 경우의 총점은 220점이다.

③ 첫날 C과목을 공부했다면, 기회비용은 총점 기준으로 9점이다.

④ 가장 취약한 A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한정된 5일을 배분할 때 각 과목의 총점 자체가 아니라 하루를 추가할 때 늘어나는 점수인 한계편익을 비교하여 총점을 극대화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공부하지 않았을 때의 총점은 52+62+63=177점이다.
각 과목의 추가 공부 1일당 점수 증가는 A과목이 10, 8, 7, 6점, B과목이 8, 7, 7, 6점, C과목이 9, 8, 7, 2점이다.
남은 5일은 앞선 공부일을 건너뛸 수 없도록 과목별 공부일수를 배분한다.

사용할 원리

총점을 가장 크게 하려면 추가 1일의 한계편익이 큰 순서로 공부일을 배분한다. 총점은 기존 총점+선택한 한계편익의 합으로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가장 큰 한계편익 다섯 개는 A과목 첫째 날 10점, C과목 첫째 날 9점, A과목 둘째 날 8점, B과목 첫째 날 8점, C과목 둘째 날 8점이다.
따라서 A과목 2일, B과목 1일, C과목 2일로 배분한다.
예상 총점은 70 + 70 + 80 = 220점이다. 이는 기존 총점 177점에 증가분 10 + 9 + 8 + 8 + 8 = 43점을 더한 결과와 같다.

선지별 해설

① X — 기회비용이 높은 선택은 포기해야 하는 최선의 대안 가치가 크다는 뜻이므로 그 자체로 유리하지 않다. 틀린 표현은 '기회비용이 높은 과목부터'이며, 올바르게는 추가 1일의 한계편익이 큰 과목부터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O — A과목 2일, B과목 1일, C과목 2일을 공부하면 총점은 70+70+80=220점으로 최대가 된다.
③ X — 첫날 C과목 공부로 얻는 9점은 편익이다. 이때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것은 A과목 첫째 날의 10점이므로 기회비용은 9점이 아니라 10점이다. 올바르게는 '첫날 C과목을 공부했다면 총점 기준 기회비용은 10점이다'이다.
④ X — A과목의 최초 점수가 가장 낮다는 사실만으로 A과목에 집중하면 총점이 최대가 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A과목을 중점적으로'이며, 올바르게는 각 과목의 한계편익을 비교하여 A과목 2일, B과목 1일, C과목 2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9점은 C과목 첫째 날의 편익인데 이를 기회비용으로 바꾸어 제시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최초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과 추가 공부의 효과가 가장 큰 과목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취약 과목의 절대점수와 한계편익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공부일수가 1일 늘 때마다 증가하는 점수를 과목별로 구한 뒤, 가능한 한계편익 가운데 큰 값부터 제한된 날짜 수만큼 선택한다. 기회비용을 물으면 실제로 선택한 대안의 편익이 아니라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편익을 찾는다.

암기 포인트

합리적 자원 배분은 절대점수가 아니라 한계편익을 비교하고, 기회비용은 포기한 최선의 대안 가치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7. 국회의 입법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환부 거부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국회뿐만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도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헌법 개정의 국회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의 재의결 요건과 헌법 개정의 제안·국회 의결·국민투표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재적의원 수, 출석의원 수, 선거권자 수, 투표자 수 가운데 어느 수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계산하는지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재의결은 대통령이 이의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을 국회가 다시 의결하는 절차이다.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개정안을 국민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법률안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환부된 법률안의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는 재적의원이 아니라 출석의원을 기준으로 한다.
틀린 표현: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
올바른 표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② X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에게 직접 제안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도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 개정이 제안된다

③ X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일반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틀린 표현: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
올바른 표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④ O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재적의원 3분의 2'와 ③의 일반 의결 정족수 표현이 함정이다. 법률안 재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3분의 2 찬성'이고, 헌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은 '재적 3분의 2 찬성'이므로 기준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절차를 법률안 재의결, 헌법 개정 제안, 헌법개정안 국회 의결, 국민투표로 나눈다. 그다음 각 단계의 기준 모수를 확인한다. 재의결은 출석의원, 개정안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국민투표는 선거권자와 투표자가 각각 기준이 된다.

암기 포인트

재의결은 '재적 과반 출석·출석 3분의 2', 개헌 국회 의결은 '재적 3분의 2', 개헌 국민투표는 '선거권자 과반 투표·투표자 과반 찬성'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는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B를 폭행하여 (ㄱ)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ㄴ)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는 A에게 징역 6월에 (ㄷ)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기>

ㄱ. (ㄱ)단계에서 A는 무죄로 추정된다.

ㄴ. (ㄴ)은 유무죄 여부 뿐 아니라 양형 의견 또한 제시할 수 있다.

ㄷ. A가 죄를 저지르지 않고 (ㄷ)의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없음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권한, 집행유예 기간 경과의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기소가 곧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으며,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무죄추정 = 형사피고인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취급하는 원칙이다.
양형 의견 = 유죄인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정할지에 관하여 배심원이 제시하는 의견이다.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유죄 확정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더 이상 통상적인 불복으로 다투어질 수 없게 된 상태이다. 따라서 기소된 A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유·무죄를 평결하고, 유죄 평결이면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와 달리 형을 선고한 뒤 집행만 유예하는 제도이며,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틀린 표현: ‘ㄱ, ㄴ’만 옳다는 조합이다.
- 올바른 표현: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② X
-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유·무죄를 평결할 뿐 아니라 유죄 평결 후 양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ㄱ, ㄷ’만 옳다는 조합이다.
- 올바른 표현: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③ O
- ㄱ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옳다. 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ㄷ은 별도의 실효·취소 사유 없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옳다. 따라서 세 진술을 모두 고른 ③이 정답이다.

④ X
- ㄱ, ㄴ, ㄷ이 모두 옳으므로 ‘없음’은 틀리다.
- 틀린 표현: ‘없음’이다.
- 올바른 표현: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오답 포인트

기소와 유죄 확정을 같은 것으로 보거나, 배심원은 유·무죄만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ㄱ 또는 ㄴ을 빠뜨리기 쉽다. 또한 집행유예를 형 선고 자체가 없는 상태로 오해하기 쉽지만, 집행유예는 형을 먼저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형사절차 문제에서는 먼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확정 전이면 무죄추정이 적용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유·무죄 평결 + 유죄일 때 양형 의견’을 함께 떠올리고, 집행유예는 ‘실효·취소 없이 기간 경과 → 형 선고의 효력 상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소되어도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배심원은 평결과 양형 의견, 집행유예는 무사 경과 시 형 선고의 효력 상실이다.

NoteBase

문 9. 다음 글에 나타난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재화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있다.

① 이 재화는 대부분 소규모 기업에 의해 생산된다.

② 이 재화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③ 이 재화의 생산을 민간 기업에 맡겨 두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④ 한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과 크기가 같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공재의 특징과 시장 실패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비배제성을 함께 지닌 재화이다. 공공재에서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민간 시장에만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된다.
공유자원은 배제하기 어렵지만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 가능량을 줄이는 경합성이 있으므로 공공재와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대부분 소규모 기업에 의해 생산된다'이다. 공공재의 판단 기준은 생산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다. 민간 시장에서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우며,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② X
틀린 표현은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 공유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현상이다. 공공재의 대표적 문제는 과잉 사용이 아니라 무임승차로 인한 과소 공급이다.

③ O
공공재는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생산을 민간 기업에만 맡기면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④ X
틀린 표현은 '한 사람이 얻는 효용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과 크기가 같다'이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할 수 있다는 뜻이지, 각 개인의 효용과 사회 전체의 효용이 같다는 뜻이 아니다. 개인별 효용은 서로 다를 수 있고, 사회적 편익은 구성원들의 편익을 합하여 판단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모두 비배제적이라는 이유로 혼동하게 만든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어서 무임승차와 과소 공급이 문제이고, 공유자원은 경합적이어서 과잉 사용과 공유지의 비극이 문제이다. ④에서는 '같은 양을 소비한다'와 '같은 효용을 얻는다'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이 줄지 않으면 비경합성,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막기 어려우면 비배제성으로 판단한다. 두 성질을 모두 가지면 공공재이며, 핵심 시장 실패는 무임승차에 따른 과소 공급이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비경합·비배제·무임승차·과소 공급이고, 공유자원은 경합·비배제·과잉 사용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보기>는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환율 변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 복수응답)
(가) 해외 투자에 영향	17.7
(나) 해외 제품 직접 구매에 영향	29.1
(다) 재직중인 회사실적에 영향	22.8
(라) 해외 수입품 가격에 영향	22.8

① (가)의 경우 환율 상승은 해외 투자 규모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나)에 답한 사람은 환율 하락을 반길 것이다.

③ (다)의 경우 수출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은 환율 상승을 반길 것이다.

④ (라)의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의 (가)~(라)가 각각 해외 투자, 해외 제품 직접 구매, 재직 회사 실적, 해외 수입품 가격과 관련됨을 확인하고, 환율 상승·하락이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표의 단위가 비율이고 복수응답임을 확인한다.
2. 각 응답 항목이 외화의 수요·수출기업의 실적·수입품의 국내 가격 중 무엇과 연결되는지 구분한다.
3. 환율 상승은 원화로 표시한 외화 가격의 상승, 환율 하락은 그 가격의 하락이라는 기준으로 각 선지를 판단한다.

핵심 근거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외화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해외 투자와 해외 제품 직접 구매의 부담이 커지고, 수입품의 국내 가격도 상승한다. 반면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 경쟁력과 수출대금의 원화 환산액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표의 (가)는 '해외 투자에 영향'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 취득 비용이 커져 같은 원화 자금으로 할 수 있는 해외 투자의 규모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O — 표의 (나)는 '해외 제품 직접 구매에 영향'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해외 제품을 사기 위한 외화의 원화 가격이 낮아져 구매 부담이 줄어드므로 옳다.
③ O — 표의 (다)는 '재직중인 회사실적에 영향'이다. 수출업체는 환율 상승 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거나 수출대금의 원화 환산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반길 수 있다.
④ X — 표의 (라)는 '해외 수입품 가격에 영향'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방향이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하락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환율과 수입품의 국내 가격 관계를 정반대로 제시한 선지이다. 환율 상승을 원화 가치 상승으로 착각하면 방향을 거꾸로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율을 '외화 1단위의 원화 가격'으로 바꾸어 생각한다. 환율 상승이면 외화가 비싸져 해외 투자·직구·수입에는 불리하고 수출에는 유리하며, 환율 하락이면 그 반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환율 상승은 외화 가격 상승이다. 수입품 가격은 오르고 수출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NoteBase

문 11. 다음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내용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Q : 제 친구인 甲(17세)은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체포를 하려고 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어요. 제 친구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경찰관의 체포가 공무 집행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 집행을 벗어나 부당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이를 막기 위한 甲의 상해 행위는 (가)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이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③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위법한 체포를 막는 과정에서 한 상해 행위가 어떤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의 성립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위법성 조각사유는 겉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경우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다.

핵심 구분

경찰관의 체포가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면 甲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된다. 甲이 그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범위에서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甲이 17세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이다.
틀린 표현: (가)를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본 부분이다.
올바른 표현: (가)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② X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이다. 이 사례는 단순한 위난이 아니라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라는 부당한 침해를 막는 경우이다.
틀린 표현: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이다.
올바른 표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이다.

③ X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이다. 이 사례에는 보전하거나 실행할 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가)를 '청구권 보전을 위한 행위'로 본 부분이다.
올바른 표현: (가)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④ O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위법한 체포는 甲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고,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한 상당한 방위행위이므로 (가)에 정확히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현재의 위난'과 ④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혼동하기 쉽다. 사람의 위법한 공격처럼 부당한 침해를 막는 것은 정당방위이고, 공격이 아닌 위험 상태를 피하는 것은 긴급피난이다. 또한 甲의 나이보다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한지와 저항의 정도가 상당한지가 결론을 좌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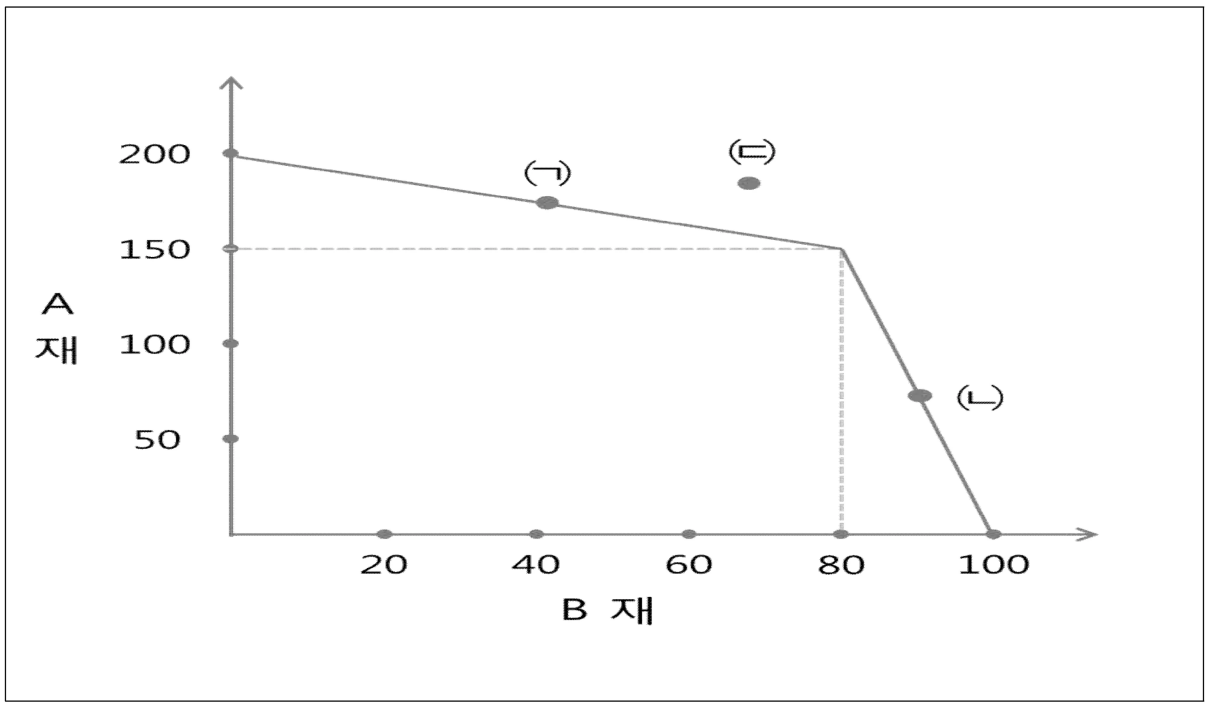
위법성 조각사유 문제에서는 먼저 행위의 목적을 확인한다. 부당한 침해의 방어는 정당방위, 현재의 위난 회피는 긴급피난, 청구권의 긴급한 보전은 자구행위, 법령·업무·사회상규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부당한 침해는 정당방위, 위난은 긴급피난, 청구권 보전은 자구행위이다.

NoteBase

문 12. 아래의 생산 가능 곡선을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B재 80개의 기회비용은 A재 150개이다.

ㄴ. (ㄱ)점이 (ㄴ)점보다 효율적인 생산조합이다.

ㄷ. 현재 기술 수준에서 (ㄷ)점은 생산이 불가능하다.

ㄹ. A재 150개와 B재 60개가 생산되었다는 것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ㅁ. A재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포기해야 하는 B재의 수는 줄어든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생산가능곡선에서 곡선 위·안쪽·바깥쪽의 의미와 두 재화 사이의 기회비용을 읽어 옳은 보기의 개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은 A재, 가로축은 B재의 생산량임을 확인한다.
2. 곡선 위의 점은 효율적 생산, 곡선 안쪽의 점은 비효율적 생산, 곡선 바깥쪽의 점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한 생산을 뜻한다.
3. 한 재화의 기회비용은 그 재화를 늘리기 위해 포기한 다른 재화의 양으로 계산한다.

핵심 근거

ㄱ X: B재를 0개에서 80개로 늘리면 A재는 200개에서 150개로 줄어든다. 따라서 B재 80개의 기회비용은 A재 50개이며, A재 150개가 아니다.
ㄴ X: (ㄱ)점과 (ㄴ)점은 모두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으므로 둘 다 효율적인 생산조합이다. (ㄱ)점이 더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ㄷ O: (ㄷ)점은 생산가능곡선 바깥쪽에 있으므로 현재의 자원과 기술 수준에서는 생산할 수 없다.
ㄹ O: B재 60개일 때 생산가능곡선 위의 A재 생산량은 150개보다 많다. 따라서 A재 150개와 B재 60개의 조합은 곡선 안쪽에 있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상태이다.
ㅁ X: A재 생산량을 늘리며 오른쪽 구간에서 왼쪽 구간으로 이동하면, 추가 A재를 얻기 위해 포기하는 B재의 양은 오히려 커진다. 따라서 '줄어든다'가 아니라 '늘어난다'가 옳다.
옳은 보기는 ㄷ과 ㄹ의 2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옳은 보기는 1개가 아니라 ㄷ과 ㄹ의 2개이다. 올바르게는 '2개'이다.
② O: 옳은 보기가 ㄷ과 ㄹ, 모두 2개이므로 맞다.
③ X: 옳은 보기는 3개가 아니라 2개이다. 올바르게는 '2개'이다.
④ X: 옳은 보기는 4개가 아니라 2개이다. 올바르게는 '2개'이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B재 80개를 생산할 때 남는 A재 150개를 기회비용으로 착각하기 쉽다. 기회비용은 남은 양이 아니라 포기한 양이므로 200개에서 150개로 감소한 50개이다. 또한 곡선 위의 서로 다른 두 점은 생산 구성만 다를 뿐 모두 효율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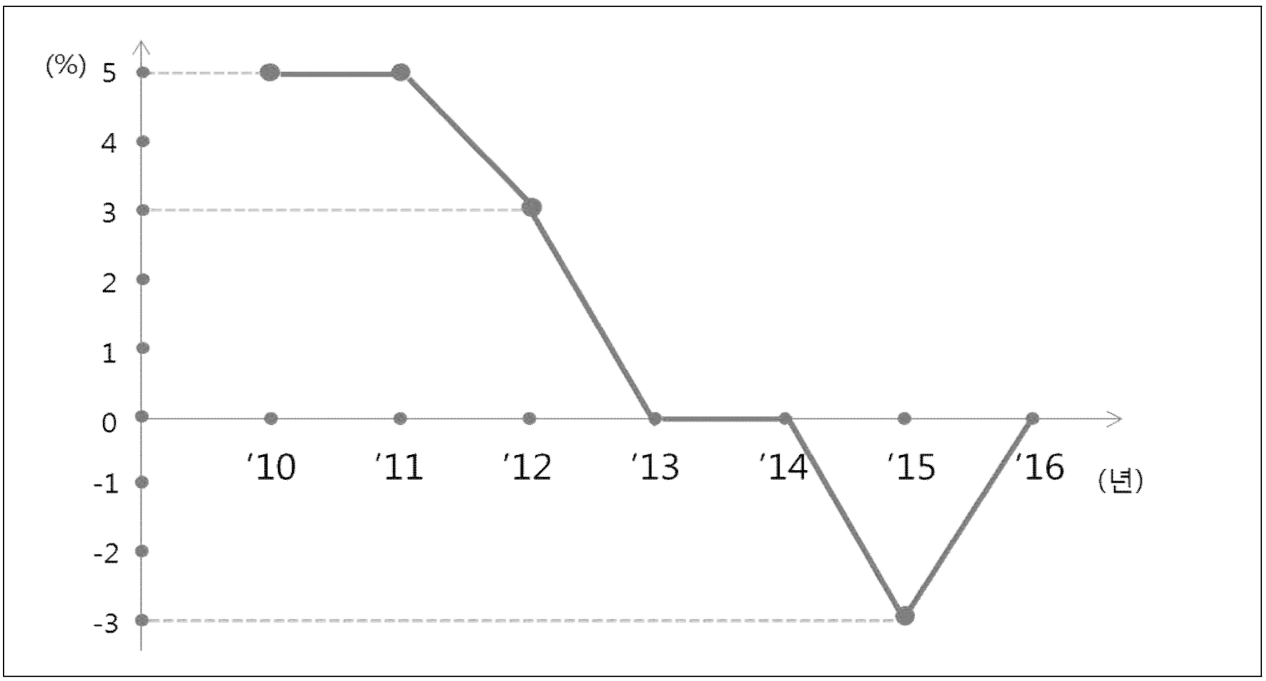
먼저 각 점이 생산가능곡선의 위·안쪽·바깥쪽 중 어디에 있는지 구분한다. 기회비용은 이동 전후의 다른 재화 생산량 차이로 구하고, 보기의 참·거짓을 확정한 뒤 참인 보기의 개수를 선택지와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곡선 위는 효율, 안쪽은 비효율, 바깥쪽은 현재 생산 불가능이며, 기회비용은 남은 양이 아니라 포기한 양이다.

NoteBase

문 13. 아래는 어느 국가의 GDP 증가율 추이와 이를 분석한 내용이다. 옳은 설명을 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0년의 GDP규모가 '15년 보다 크다.
ㄴ. '12년, '13년, '14년의 GDP규모는 모두 동일하다
ㄷ. '16년의 GDP 규모가 '15년의 GDP 규모보다 크다.
ㄹ. '10년~'12년 사이 GDP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GDP 증가율과 GDP 규모를 구분하고, 증가율이 양수·0·음수일 때 GDP 규모가 각각 증가·유지·감소한다는 점을 그래프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은 GDP 규모가 아니라 전년 대비 GDP 증가율(%)임을 확인한다.
2. 증가율이 양수이면 GDP 규모는 전년보다 커지고, 0%이면 같으며, 음수이면 작아진다.
3. 여러 해의 규모를 비교할 때에는 증가율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전년 규모에 차례로 적용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ㄱ X: 2010년 GDP를 100이라 하면 2011년은 105, 2012년은 108.15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그대로이고 2015년에는 3% 감소하므로 2015년 GDP는 $108.15 \times 0.97 = 104.9055$이다. 따라서 2015년 GDP가 2010년 GDP보다 크다.
ㄴ O: 2013년과 2014년의 증가율이 모두 0%이므로 2012년, 2013년, 2014년의 GDP 규모는 동일하다.
ㄷ X: 2016년 증가율이 0%이므로 2016년 GDP 규모는 2015년과 같다.
ㄹ O: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율이 모두 양수이므로 GDP 규모는 계속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은 틀리다. 2011년과 2012년의 증가분을 거친 뒤 2015년에 3% 감소해도 2015년 GDP는 2010년보다 크다. 옳은 조합은 ㄱ, ㄴ이 아니라 ㄴ, ㄹ이다.
② X —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그래프에서 2016년 증가율은 0%이므로 2016년 GDP는 2015년보다 큰 것이 아니라 2015년과 같다. 옳은 조합은 ㄴ, ㄷ이 아니라 ㄴ, ㄹ이다.
③ X — ㄹ은 옳지만 ㄱ은 틀리다. 누적 증가를 반영하면 2015년 GDP가 2010년 GDP보다 크다. 옳은 조합은 ㄱ, ㄹ이 아니라 ㄴ, ㄹ이다.
④ O — ㄴ과 ㄹ이 모두 옳다. 2013년과 2014년의 증가율은 0%이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GDP 규모가 같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양의 증가율이 이어져 GDP 규모가 계속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그래프의 선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GDP 규모의 감소로 오해하기 쉽다. 2012년 증가율은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3%이므로 GDP 규모는 증가한다. 또한 증가율 0%는 GDP가 0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년과 같은 규모라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로축이 규모인지 증가율인지 확인한다. 증가율 자료라면 양수는 규모 증가, 0%는 규모 유지, 음수는 규모 감소로 바꾸어 읽고, 떨어진 뒤의 규모 비교는 각 연도의 증가율을 누적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증가율 하락은 규모 감소가 아니며, 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증가율이 음수일 때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타인의 몸짓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거울의 반사와 유사한데,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들의 반응을 통해 얻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대하는 타인의 몸짓을 통해 타인의 판단을 알아채며, 스스로에 대한 자아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의식과 자아 감정을 발전시킨다.

① 구성원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적 가치가 중시된다.
② 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 객관적인 사회 조건을 중시한다.
③ 개인의 사고를 제약하는 독립적 실체로서의 사회를 강조한다.
④ 사회 현상을 구성해 내는 개인들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중시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나타난 거울 자아를 통해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관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들이 상징을 사용하여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아와 사회 현상이 형성된다고 보는 미시적 관점이다. 거울 자아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바탕으로 자아가 형성된다는 개념이다. 반면 사회 실재론적 관점은 사회를 개인과 독립하여 존재하면서 개인을 구속하는 실체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구성원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적 가치가 중시된다'는 표현은 개인 외부의 사회 구조와 규범의 구속력을 강조하는 거시적·사회 실재론적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개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공유하는 의미가 사회 현상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X — '주관적 판단보다 객관적인 사회 조건을 중시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객관적 사회 조건보다 행위자가 상황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와 해석을 중시한다.
③ X — '개인의 사고를 제약하는 독립적 실체로서의 사회'라는 부분이 틀렸다. 이는 사회 실재론적 관점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사회 현상을 개인들의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④ O — 타인의 몸짓과 반응을 해석하면서 자아가 형성된다는 제시문의 내용은 개인들의 능동적인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①~③은 모두 사회가 개인과 독립하여 존재하고 개인을 제약한다는 거시적 관점의 표현이다. 제시문의 '타인의 반응', '자신에 대한 이미지', '자의식의 발전'은 개인 간 상호 작용과 의미 해석을 가리키므로 ④와 연결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타인의 반응을 해석함’, ‘상황에 의미를 부여함’, ‘상호 작용 속에서 자아가 형성됨’이 제시되면 상징적 상호 작용론으로 판단한다. ‘사회 구조·규범이 개인을 구속함’이 제시되면 거시적·사회 실재론적 관점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거울 자아는 타인의 반응이라는 거울을 통해 형성되는 자아이며, 핵심은 주관적 의미와 능동적 상호 작용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관세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9년 1월에 비해 1933년 1월의 전 세계의 무역량은 거의 1/3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무역량이 줄어든 것은 40개국 이상이 보복관세를 통하여 서로 관세를 올린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 기간 동안에 관세를 올려서 평균 수입 관세가 약 60%에 달하였다.

① 국내 및 해외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②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였다.

③ 관세 부과는 무역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④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요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관세가 국내 생산자, 해외 생산자, 소비자 및 국제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높여 국내의 수입 경쟁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해외 생산자는 가격 경쟁력과 수출 기회가 줄어들고, 국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과 줄어든 선택 가능성 때문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여러 국가가 보복관세로 맞서면 무역량이 감소하고 무역 분쟁과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국내 및 해외의 생산자를 보호'이다. 관세는 국내의 수입 경쟁 생산자를 보호하지만, 해외 생산자에게는 수출 가격 경쟁력과 판매 기회를 낮추는 불리한 조치이다. 올바르게는 '국내의 수입 경쟁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해야 한다.
② O —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고 소비 선택이 줄어들므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
③ O — 한 국가의 관세 인상은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불러올 수 있다. 제시문에서도 40개국 이상이 서로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므로 관세가 무역 분쟁의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O — 제시문처럼 각국이 관세를 경쟁적으로 올리면 세계 무역량이 급감한다. 이러한 보호무역의 확산은 생산과 교역의 위축을 초래하여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해외의 생산자'까지 보호한다는 표현이 함정이다. 관세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은 관세를 부과한 나라의 국내 생산자이며, 해외 생산자는 오히려 그 나라 시장에서 불리해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세의 효과는 이해관계자별로 나누어 판단한다. 국내 생산자에게는 보호 효과, 국내 소비자에게는 가격 상승과 후생 감소, 해외 생산자에게는 수출 감소 압력, 국가 간에는 보복관세와 무역 축소 가능성이 나타난다.

암기 포인트

관세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지만, 소비자와 해외 생산자에게는 불리하며 보복관세가 이어지면 세계 무역이 위축된다.

NoteBase

문 16.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ㄱ. 전수 조사는 모집단에서 일정 수의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방법이다.
ㄴ. 종속변수는 어떤 분석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변수를 말한다.
ㄷ. 연구 대상으로부터 표집된 일정한 대상에 대해 처치를 하는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한다.
ㄹ. 양적 연구 절차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하여 사회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해하려는 연구방법이다.

① 3개
② 2개
③ 1개
④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전수 조사와 표본 조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뜻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ㄱ부터 ㄹ까지 모두 옳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은 없다.

핵심 개념

전수 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고, 표본 조사는 모집단에서 일부 표본을 뽑아 조사한다.
독립변수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이고, 종속변수는 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 변수이다.
실험 집단은 연구자가 처치를 가하는 집단이고, 통제 집단은 처치를 가하지 않아 비교 기준이 되는 집단이다.
양적 연구는 계량화된 자료와 통계적 분석으로 일반적 법칙을 찾고,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과 감정 이입을 통해 사회 현상의 의미를 해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3개'가 틀렸다. ㄱ은 일부 표본을 뽑는 표본 조사를 전수 조사라고 했고, ㄴ은 독립변수의 뜻을 종속변수라고 했으며, ㄷ은 실험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했으므로 세 진술 모두 옳지 않다. 올바른 개수는 0개이다.
② X — '2개'가 틀렸다. 네 진술 가운데 옳은 것은 없으므로 올바른 개수는 0개이다.
③ X — '1개'가 틀렸다. ㄹ의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하여 사회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은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이므로, 나머지 진술과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 올바른 개수는 0개이다.
④ O — ㄱ부터 ㄹ까지 모두 개념의 명칭과 설명이 뒤바뀌어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없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각 진술은 설명 자체가 낯선 것이 아니라 서로 짝을 이루는 개념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ㄱ의 '일정 수의 표본', ㄴ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ㄷ의 '처치를 하는 집단', ㄹ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해'가 각각 표본 조사, 독립변수, 실험 집단, 질적 연구를 가리킨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사 대상이 전체인지 일부인지, 변수가 원인인지 결과인지, 처치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 연구가 계량·통계 중심인지 의미 해석 중심인지의 순서로 대응 개념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옳은 진술의 수를 세어 선택지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전체는 전수, 일부는 표본 / 원인은 독립, 결과는 종속 / 처치는 실험, 무처치는 통제 / 계량은 양적, 의미 해석은 질적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대화에서 '甲'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甲 :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투표권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乙 : 왜 옳지 않아?
甲 :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큰 권리를 줘야 해.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과 비례해서,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주어야 한다고 봐.
乙 : 하지만 그것은 민주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① 보통선거
② 평등선거
③ 비밀선거
④ 직접선거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세금 납부액에 따라 유권자에게 서로 다른 수의 표를 주자는 주장이 민주 선거의 어떤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통선거는 재산·성별·신분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이른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에게 같은 수의 표를 주고 각 표의 가치도 동등하게 취급하는 원칙이다.
비밀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고, 직접선거는 유권자가 중간 선거인을 거치지 않고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보통선거 위반이 아니다. 甲도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자의 범위를 재산이나 납세액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틀린 판단은 '보통선거 위반'이며, 올바르게는 '평등선거 위반'이다.
② O.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더 많은 수의 표를 주자는 주장은 유권자마다 표의 수를 다르게 하므로 1인 1표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③ X. 비밀선거 위반이 아니다. 대화에는 투표 내용이나 투표한 상대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없다. 틀린 판단은 '비밀선거 위반'이며, 올바르게는 '평등선거 위반'이다.
④ X. 직접선거 위반이 아니다. 대화에는 중간 선거인을 두거나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자는 내용이 없다. 틀린 판단은 '직접선거 위반'이며, 올바르게는 '평등선거 위반'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모두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부분만 보면 보통선거가 떠오르지만, 실제 쟁점은 그다음의 ‘세금에 비례하여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준다’는 표현이다. 선거권을 누구에게 주는지는 보통선거, 각 유권자의 표 수와 가치가 같은지는 평등선거의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거권의 범위를 제한하면 보통선거, 사람마다 표의 수나 표의 가치를 달리하면 평등선거, 투표 내용을 공개하면 비밀선거, 중간 선거인을 거치면 직접선거 위반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누가 투표하는가는 보통, 표의 수와 가치는 평등, 투표 내용의 공개 여부는 비밀, 대표자를 뽑는 방식은 직접이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경제 정책에 관련된 신문 기사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최근의 경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지급 준비율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보

①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정부와 중앙은행은 모두 현재의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중앙은행의 정책은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④ 정부의 재정 정책이 시행된다면 민간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확대 재정 정책과 긴축 통화 정책의 수단 및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대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여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지급 준비율 인상은 은행의 대출 여력을 줄여 통화량과 총수요를 축소하는 긴축 통화 정책이다.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는 정책도 시중 자금을 흡수하므로 지급 준비율 인상과 방향이 같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이다.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소득세율·법인세율을 낮춰 민간의 가처분소득과 지출을 늘린다.

② X
틀린 표현은 '정부와 중앙은행은 모두 현재의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는 부분이다.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방향인 반면,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상은 경기 과열이나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는 긴축 방향이므로 두 정책의 경기 판단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③ O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과 통화량이 감소한다.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해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경우에도 통화량이 감소하므로 두 정책은 같은 긴축 효과를 기대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민간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가 감소'한다는 부분이다. 확대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 증가나 감세를 통해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금리 상승으로 민간 투자가 일부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확대 재정 정책의 총수요 효과가 감소 방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기사에는 확대 재정 정책과 지급 준비율 인상이 함께 제시되지만 두 정책의 방향은 반대이다. 특히 ④에서는 확대 재정 정책의 직접 효과와 금리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를 바꾸어 제시한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 지출 증가·감세는 총수요를 늘리는 확대 재정 정책으로, 지급 준비율 인상·공개시장 매각은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통화 정책으로 분류한다. 정책 수단을 먼저 확장과 긴축으로 나누면 효과를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재정 확대는 정부 지출 증가·감세, 통화 긴축은 지급 준비율 인상·국공채 매각이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어느 연구 계획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연구주제 : 해양 레저 종사자의 해로드 어플리케이션 사용 실태
▶ 표본 : 낚시 어선 등 해양 레저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 중 무작위로 추출한 200명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내용 : 해로드 어플리케이션 설치 여부, 사용방법을 안내받은 경험 유무 등
▶ 자료분석 : 통계 프로그램 활용, 분석
<보기>
ㄱ. 방법론적 일원론에 근거하고 있다.
ㄴ. 구조화·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ㄷ. 인간 행동의 동기·의미 파악에 용이하다.
ㄹ.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연구 계획에 나타난 조사 방법과 자료 분석 방식으로 양적 연구의 특징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양적 연구는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수치화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법칙을 찾는 연구 방법이다. 방법론적 일원론, 구조화·표준화된 자료 수집, 통계 분석이 핵심 특징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와 행동의 동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방법론적 이원론, 비구조화·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은 모두 옳다. 무작위로 추출한 200명을 설문 조사하고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므로 양적 연구이며,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에 같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근거한다. 또한 설문 조사는 구조화·표준화된 질문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② X —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인간 행동의 동기·의미 파악에 용이하다'는 질적 연구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양적 연구는 수치화와 통계 분석을 통한 일반화 및 법칙 발견에 유리하다고 해야 한다.
③ X — ㄱ은 옳지만 ㄹ이 틀렸다.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한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표현은 제시된 설계와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이 연구가 설문 결과를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해야 한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ㄹ이 틀렸다. 구조화·표준화된 설문은 양적 연구의 특징이므로, 이를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하는 질적 연구로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표준화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양적 연구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설문조사'라는 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표본 규모, 무작위 추출, 조사 문항, 통계 프로그램 분석을 함께 보아야 한다. 특히 ㄷ의 '동기·의미'와 ㄹ의 '직관적 통찰'은 질적 연구를 가리키는 대표 표현이므로 양적 연구 계획과 결합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치화·통계 분석·표준화·일반화가 보이면 양적 연구로, 의미 이해·심층 해석·직관적 통찰·비표준화가 보이면 질적 연구로 판단한다. 그런 다음 보기 각각의 진위를 먼저 확정하고 선택지의 조합을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양적 연구는 '표준화하여 수치로 설명', 질적 연구는 '심층적으로 의미를 이해'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보카(Boca) 지역의 하층 계급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그들의 고단한 삶을 달래 주는 춤이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지배 계급은 탱고를 '부둣가에서나 추는 음탕하고 천박한 춤'이라고 멸시했지만 특유의 전염성으로 이민자들을 통해 유럽으로 번져 나갔다. 특히 20세기 초 파리와 런던에서 탱고가 전성기를 구가하자 아르헨티나 주류 엘리트들도 차츰 탱고를 배우기 시작했다. 탱고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주요한 관광자원이며 하층과 상층이 모두 즐기는 전통 춤이 되었다.

<보기>
ㄱ. 아르헨티나에서 초기의 탱고는 특정 계급의 하위문화였다.
ㄴ. 유럽 사람들이 탱고를 즐기기 시작한 것은 문화 접변의 사례에 해당한다.
ㄷ. 탱고가 처음 시작될 당시 지배계급이 보여 준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에 가깝다.
ㄹ. 유럽 사람들이 탱고를 수용한 것은 유럽의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탱고가 계급별 하위문화에서 다른 사회로 전파되고 널리 수용되는 과정을 하위문화, 문화 접변,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의 개념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하위문화는 한 사회의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독특한 문화이다. 문화 접변은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한쪽 또는 양쪽 문화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고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이고,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이 모두 옳다. 초기 탱고는 아르헨티나 하층 계급이라는 특정 집단이 향유한 문화이므로 하위문화이고, 유럽 사람들이 이민자를 통해 탱고를 받아들인 것은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가 접촉한 문화 접변의 사례이다.
② X — ㄱ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유럽 사람들이 외래 문화인 탱고를 수용한 태도를 유럽의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탱고의 유럽 수용은 문화 전파에 따른 문화 접변의 사례이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지배 계급이 탱고를 천박하다고 멸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는 문화 사대주의라고 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이는 하층 계급의 문화를 낮게 평가한 문화적 편견에 해당한다.
④ X — ㄷ과 ㄹ이 모두 틀리다. ㄷ의 태도는 외국 문화를 숭상한 문화 사대주의가 아니라 하층 계급의 문화에 대한 편견이고, ㄹ의 탱고 수용은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외래 문화를 배척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라 문화 접변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문화 사대주의'는 단순히 어떤 문화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사회의 문화를 우월하게 보고 자기 문화를 낮추는 태도여야 한다. 또한 ㄹ처럼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현상을 자문화 중심주의와 혼동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정 집단만 공유하면 하위문화,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가 접촉하여 수용·변화가 일어나면 문화 접변으로 판단한다. 태도 문제에서는 외국 문화 숭상과 자기 문화 비하가 함께 나타나는지, 또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지를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특정 집단의 문화는 하위문화, 문화 간 접촉과 수용은 문화 접변이다. 외국 문화 우월시는 문화 사대주의, 자기 문화 기준의 타 문화 평가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NoteBase